

데스크 시각



김지열 사회부장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지금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천주교 사제 1466명이 발표했던 시국선언문 제목이다.

요즘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을 보면 이 말이 딱일 듯 싶다.

권한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안정적 국정과 선거 관리를 총괄할 심판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수로 될 지 ‘간보기’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환율방어 책임자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 가치 하락에 배팅한 부총리, 자의적 법 해석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 판사, 지체없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검찰총장, 질문하는 기자 손목을 잡아 끌고 가거나 ‘짜라시’라는 폭언을 한 국회의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맞닥뜨리며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불법행위·원천무효’를 외치다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국회의원...

신기하게도 이 정부엔 보통 사람의 상식을 우롱하는 공직자들이 차고 넘친다.

‘어째 사람들이 그 모양인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내온 천주교회 성명은 그래서 더 흥미롭다.

50년 전인 1974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결성 당시 시국 선언도 우리 사회 민주화와 함께 한 이유가 드

공직 조력자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리난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 그의 생존권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일깨우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교회는 이 기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이든 그의 편에서 그를 대변하면서 유린당한 그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그를 거슬러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0년이 넘는 지금도 천주교 사제들이 내놓은 성명은 시민들의 속마음을 대변하고 주목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이 지난 3월 말 사순절 주간에 맞아 발표한 ‘시국선언문’도 그렇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승복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나 요즘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속상함을 알아냈다. 사제들은 “어정쩡히 살아서 움직이는 대통령의 수족들이 우리 역사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로 시작하는 선언문을 통해 ‘타락한 공직’을 지적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현재의 결정을 들고도 애써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혼계합니다./.../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장구치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졌으며 견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치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공직자, 내란 세력을 돕는 ‘독재 조력자’에 대해서도 직격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일침일획조차 무겁고 무섭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 관료들

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짓밟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납입했던 폭도들 이상으로 법의 뿌리를 흔들어도 기도 합니다./.../정의 없는 국가란 ‘강도때’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만도 못한 ‘사자들’이 우리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타락한 공직, 강도때만 못한 사자들

헌법 제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쯤되면 헌법 규정은 내팽개쳐버린다.

엄치는 커녕 불법을 저지르고도 뭉개는데, 말은 가볍게 뒤집힌다.

국회에서는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5분도 안돼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신청하면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대국민담화도 1년 만에 아무 일 없는 듯 뒤집어엿는다.

정부 서열 1:2위 말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 끈질긴 설득·협상 과정을 통해 국립대 통합을 거쳐 전남권 국립대의 설립을 요청했는데 없던 일이 됐다. 허탈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의대 하나 없는 ‘30년 숙원’ 사업이 이제야 풀리려나 했던 지역민들 심정을 알기나 할까.

이런데도 대책은 고사하고 책임질 정부는 외면하고 책임지겠다는 공직자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50일도 남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직자 자화상은 달라져야 한다. 풀리처상 수상자인 스티븐 그린블랫이 ‘독재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분석한 책 ‘폭군’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쁜 지도자의 위협적 행태에 겁을 먹었거나 미지못해 일하거나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공직 ‘조력자’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역민 삶의 변화를 위해.

은폐칼럼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1년 후 다시 보기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구조’가 더 큰 문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1인당 의료기관 내원일수 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은 현재 의사의 업무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사 수이다. 2050년에 예상되는 인구변화의 총량만을 고려하면 약 2만 2000명에서 3만명 정도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딱 여기까지이다. 의과대학 정원의 증원을 위해 경제학자들의 연구 중 여기까지만 이용했다.

2072년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대졸이고 그중 절반이 65세 이상이다. 경제활동인구도 고학력화된다. 고학력 고령층은 건강을 위해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의료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으로 건강관련 지표를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어들게 된다. 고학력 고령화가 가져오는 건강상태의 개선과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를 고려하면 인구총량의 변화만을 적용한 전망치의 40% 정도인 2035년 3000명, 2050명 80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의 질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2030년 이후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7년간 매년 5~7% 정도 증원하고 유지하면 2050년에 예상되는 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2025년부터 5년간 입학정원 2000명씩 증원은 한마디로 ‘개소리’다.

의료는 공급을 늘리는 것 보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급은 주로 시장 논리에 의해, 수요는 전 국민건강보험 등 국가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 의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과 기후 환경변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사회적 불평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보험제도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의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불균형 해결은 수요를 줄이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이다. 인구 변화의 총량뿐만 아니라 구조에 대한 장단기 전망과 촘촘한 계산으로 공급을 조절해야 하며 의료인력을 줄이는 계획도 세워야 한다. 단 한번도 합리적이 지 않았던 시장에 의료의 공급을 맡겨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그 동안 망가뜨려진 국가를 복구하는 일 모두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어 버렸다. 지난 1년간 의료계에 대한 폭력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의료는 결집된 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는 노력과 그에 따른 고통 모두 학생들과 전공의들만의 짐으로 남길 수는 없다. 또한 이미 증원되어 입학한 신입생들이 ‘우리’라는 울타리의 또 다른 ‘우리’가 되지 않도록 잘 보듬어야 한다.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에 내일을 더하면 세상이 조금은 바뀌기도 한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른들이 일을 해야 할 시간이다. 나서는 말고 지키고 버텨야 한다. 국가의 폭력은 항상 과거완료 수동형으로 표현되지만 항상 현재진행 능동형이다.

기고

휴대폰 없는 날



김경련 아동문학가·고려중 교사

로 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편했다. 아주 급한 연락은 남편 휴대폰이 있으니 조금 안심은 되었지만, 늘 애인처럼 끼고 살던 휴대폰이 없으니 허전한 마음이 더했다.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도 다른 때 같으면 아마 잠깐 쉴 때마다 연락할 일이 없어서 휴대폰을 열어 보고 만지작거렸을 것이다. 그런데 여유가 생기기 자연스레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사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좋은 점이라면 나의 두 손과 눈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그것은 온전히 하객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던 장점이었다. 만약 핸드백 안에 휴대폰이 있었다면 안 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휴대폰이라는 손안의 기계에 저장·잡히고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요즘은 패스트푸드, 패스트 패션에 이어 패스트휴대폰 시대다. ‘환경에 관한 가치관과 소비 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3일간 휴대폰 없는 날을 정해 보는 건 어떨까 했더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해보자 하셔서 수행해보기로 하였더니 동의했

다. 그렇게 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설문지를 나눠 주고 표시하게 했더니 몇몇 학생들은 너무 힘들어했다. 친구랑 연락을 못하고 시계를 볼 수 없어서 답답했다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집된 듯이 괜찮았다고 하였다. 그런 거 보면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모두 없는 것 하고 나 하나만 없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가져 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때 ‘너의 미학’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지금 다시 그 책을 보고 싶다. 달팽이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은 가는 것처럼 조금 느림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생활도 필요할 땐 휴대폰으로 소통한다. 편리함으로 치자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는 날로 정하면 실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루 중 집에서 안 가져온다고 큰일이 생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이 학교에 못 오는 이유를 알아야 할 때는 불편한 점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선 전화라는 차선택도 있지 않은가. 다양히 완전 불통은 없는 것이다.

社說

호남권 메가시티 민주당 대선 공약 채택을

호남권 메가시티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수도권에 대응해 추진하는 생존 전략이다. 광주·전남·전북이 호남이라는 뿌리를 매개로 경제동맹을 맺어 공존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전략이다.

호남을 공동 생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호남권 메가시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해 광주·전남·전북도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제동맹을 시발점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초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3개 시도가 생활권을 공유하는 데 있다. 고속도로와 고속열차 등을 확충해 호남을 1시간 통행권으로 만들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 및 경제권을 공유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한 후에는 광주의 인공지능(AI),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전북의 바이오클러스터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관광도 연계해 남도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권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초광역 교통망 확충의 경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인프라 사업이다보니 정부의 지원없이 불가능하다. 마침 조기 대선에 뛰어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번 주 호남권 순회 경선에 나선다.

김경수 후보는 어제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가시티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도 내일과 모레 호남을 방문한다. 후보들마다 호남권 맞춤형 공약을 많이 준비했을텐데 메가시티를 가장 큰 카테고리 공약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민주당 차원에서 호남권 메가시티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국가AI데이터센터 예산 고작 4% 반영이러니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국가AI 데이터센터 운영 예산 전액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가 광주시가 올린 670억원의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을 요구액의 3.7%인 25억원만 추경에 반영한 데 따른 반발이다.

광주상의는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 간사와 위원들을 상대로 건의문을 내고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인공지능(AI)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670억원의 국비를 추경안에 포함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AI데이터센터를 ‘지역 사업’으로 의미를 축소해 25억원만 반영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AI 인프라인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마당에 광주만 별

도 지원하는 것은 예산 중복 집행이라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광주에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는 900여개 기업이 2000여건의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공공 인프라다. 기업 지원은 물론 고성능 연산 장비,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보안 인증 체계, AI 테스트베드 등 핵심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저비용으로 AI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하도록 돕고 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지역 사업으로 폄하해 절감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국가 공공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려를 빚는 일이다. AI 반도체와 초거대 언어 모델,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공 AI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는 국내 유일의 국가AI 데이터센터 활용을 위해서도 운영 예산 전액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잠시 방심한 틈에 그들의 타깃이 되었다. 빈틈이 보인다 싶으면 눈앞에 등장하는 이들, 일명 ‘도민맨(도를 믿는 사람)’이다. 지난 저녁 퇴근길, 누군가가 다가오며 인사를 건네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봐요)...” 순간 정신이 반짝 들어 획 지나쳤다. 세이프다.

겨울 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들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다시 길거리에 등장했다. 타깃이 되고 싶지 않아 언젠가부터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을 감추고 인상을 쓰며 걷게 된다. 인터넷에 ‘길거리에서 말 거는 사람들’에 대한 재미

‘도민맨’의 양상

방법들도 등장하는데 체적으로 ‘무시하라’는

“인상이 좋으시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면 대순진리회라는 종교단체,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어머니 하나님은 안계실가요”라며 접근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단체, 젊어 보이는 남녀가 대학생 동아리라며 설문조사 또는 심리 테스트를 해준다고 하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간치마를 입은 아주머니들이 홍보 전단지들을 배포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 하얀 셔츠 검은 바지에 명찰을 달고 다니며 말을 건네면 물론교라는 종교

단체 사람들이다. 이래나 저래나 이단·사이비로 분류되는 포교자들이다.

“도를 아십니까” “도를 믿으십니까”는 꽤 오래된 방식이다. 요즘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고민이 많아 보이세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학생이세요? 설문참여 한번만 해주세요” 라거나 길을 묻는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2인 1조로 움직이지만 혼자서 움직이기도 한다. 물론 언제라도 합류할 수 있도록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일당(?)이 따라오고 있을 테지만 말이다. 도민맨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들도 등장하는데 체적으로 ‘무시하라’는

답이 압도적이다. 반응하지 말고 내 갈길 가라는 얘기다. 조금이라도 대꾸를 할라치면 말꼬리 물고 대화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도민맨들의 활동은 단지 사이버 종교의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빈틈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거리 위 그들보다 우리 안의 빈틈일지도 모르겠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details.